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경|영|저|널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모든 카피

대구 최대 준공권역 서류, 고속복사, 컬러복사 제본,  
청사진, 대형칼라출력, CAD입출력, 각종연향판  
(대표 이덕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91

TEL: 053426-8252~3 FAX: 053426-8251



**COVER STORY** / 백상승 경주시장

**정책제안** /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및 활용방안

**청호평론** / 사이버보안도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

**기획특집** / 토심 공공디자인은 도시 경쟁력이다

**인물FOCUS** / 윤도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시사논단** / 비정규직법 논란,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기업탐방** / 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 대구 '희망자건거제작소'

**부동산가이드** / 2009년 하반기 부동산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통권 제17호

## »» Photo Essay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즐거운 여름휴가가 시작됐다. 수많은 피서객들이 시원한 파도소리와 상큼한 바다내음을 만끽하기 위해 해변을 찾고 있다.

해수욕장은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울해도 어김없이 탁 트인 전경과 시원한 바다를 찾아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전국의 해수욕장은 발 디딜 틈이 없다. 백사장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파라솔들이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자태를 뽐내고 있다.



글/조종성 편집국장 · 사진/해운대 구정

경영저널 [www.ecomanagement.co.kr](http://www.ecomanagement.co.kr)

동권 제 17호 | 발행인 이진구 | 편집국장 조종성 | 편집위원 이준영, 윤일영, 정성민, 강석민, 김정국 | 취재팀장 우성덕 | 기자 장경태, 홍순태 | 사진기자 이준혁  
서울 · 경기취재본부: 031472-2061 | 울산 · 경남취재본부: 052223-2261, 창간 2007년 11월 5일 | 등록번호 권제2101230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곡5길 18 1층 301호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 E-mail chqjs333@naver.com | 가격 2,500원 | 인쇄 삼영정보인쇄사



# Contents

- 02\_ PHOTO ESSAY / 해변으로 가요 / 편집국
- 04\_ NEWS WIDE / 편집국
- 06\_ 통계를 푸는 경제 / 정성민 편집위원
- 08\_ COVER STORY / 백상승 경주사황 / 조종성 편집국장
- 12\_ 정책제안 /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및 활용방안 / 이준형 편집위원
- 14\_ 정책조명 / 미디어 관련법 통과 논란 / 편집국
- 15\_ 청호평론 / 사이버 보안도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
- 16\_ 기획특집 / 도심 공공디자인은 도시 경쟁력이다 / 우성덕 취재팀장
- 18\_ 인물FOCUS / 윤도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 우성덕 취재팀장
- 20\_ 시사논단 / 비정규직법 논란,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 홍순태 기자
- 22\_ 테마산책 / 하반기 부동산시장 소용, 전원주택은 인기몰이 / 정경태 기자
- 24\_ 기업탐방 / 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 대구 '희망자전거제작소' / 우성덕 취재팀장
- 26\_ 법령해설 / 국가법령 해석 / 편집국
- 28\_ 개정법규 / 최근 개정법규 소개 / 편집국
- 30\_ 부동산가이드 / '2009년 하반기 부동산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편집국
- 32\_ 생활경제 / '고유가 시대, '유(油)테크'로 절약하자 / 편집국
- 34\_ 리더추천릴레이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믿을 만한 일다 / 편집국

##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5만원  
 신청 방법: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chojs333@naver.com  
 성명, 받으실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이름 기재)  
 구독료 납입계좌: 국민은행 608301-04-034744  
 예금주, (주)에코

## <독자투고 받습니다.>

경영재능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로 받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과 평론 및 현장 경험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크기)이 분량으로 경영자능 편집국으로 보내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믿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번지  
 경영자능 편집국  
 이메일, chojs333@naver.com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 중소 "판로 확보가 가장 어려워"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판로 확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업체 2천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내부 요인으로 판로 확보(33.2%)를 꼽았다고 밝혔다. 또 재산성 악화에 따른 자금 부족(31.5%), 인력 부족(16.0%), 마케팅 능력 부족(10.5%), 기술 수준 낙후(5.2%) 등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내부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중소기업 26.3%가 공공기관 등 거래처 발굴과 연계사업 강화

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마케팅 비용 지원(18.7%),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17.3%)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바라는 의견이 25.7%로 가장 많았고 해외시장 정보 강화(25.1%), 통관절차 및 세관서류 간소화(22.9%),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22.3%) 등이 있었다. 이밖에 34.6%의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경련, 기업체감경기 4개월째 혼조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4개월째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액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9.8로 나타나, 7월 BSI 전망(98.7)을 소폭 웃돌았다. 특히 BSI 전망은 5월 103.8에서 6월에는 100.2로 주춤했다가 7월에는 98.7로 다시 소폭 하락한 뒤 8월 약하게 반등하는 등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소폭 등락하고 있다. BSI 전망치는 100 이상이면 경기 호진을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고, 100 이하는 반대를

의미한다. 전경련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지표 하락폭 축소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6월 말 미국 실업률이 9.5%에 달하고 상업 부동산의 부실이 표면화하는 등 위험요인들이 그대로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기가 불확실하고 하반기 재정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나 감세 유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내다봤다.

## 대구 건설업계 상반기 수주액 대폭 증가

대구지역 건설업체들이 공공부문 수주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수주 실적에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 건설업체들의 계약실적은 8천9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천59억원에 비해 26.5% 늘었다. 이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조기발주 방침에 따라 토목공사 위주의 공공부문 발주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계약액이 7천38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272%가 늘었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 지속으로 주택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와 전반적인 불황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계약 실적이 1천890여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63.3%가 줄었다. 이에 올 상반기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공부문 수주액은 민간부문 수주액의 3.7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청사·박물관 불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공공청사나 박물관, 미술관, 제조업소 등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하는 경우 주변 10km 이내에 있는 훼손지 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화물차 차고지 등 11종의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는 수목장림,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 이하 건축연면적 5천㎡ 이하) 및 노인요양시설, 5층 이내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만 허용된다. 단, 이미 사업에 착수한 화물차 차고지는 2011년 8월6일까지, 국제행사 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2015년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 경남 지자체 지역특화연구소들 '우수'평가

경남의 지자체들이 설립, 운영하는 지역특화사업 연구소들이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가 실시한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9개 연구소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또 남해군의 마늘연구소는 3위, 산청군의 한방약초연구소는 5위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하동녹차연구소와 남해마늘연구소는 각 5천만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3천500만원의 국비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받게 됐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지역특화연구소 건립과 장비구축,

공동연구개발, 기업지원, 시현생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식경제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연구소에는 인센티브로 국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대신 사업이 저조한 곳은 보조금 일부를 삭감하고 있다. 경남도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국비 141억원 등 317억원을 투입, 하동녹차연구소와 남해마늘연구소를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에 추가 선정된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는 2013년까지 국비 85억원 등 196억원이 투입된다.

##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조달사업 조기집행 우수기관

경북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조달청의 2009년도 조달사업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달사업의 조기 집행을 추진,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증가한 29조7614억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했다. 이에 조기집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특별한 노력이 돋보인 전국 공공기관 13곳을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평가했다. 우수기관은 조기집행 노력 정도와 지난

해 대비 조달요청 증가율, 신규 조달요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6.4% 초과한 568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는 등 조달요청 실적 및 증가율이 우수했다. 또 선금 지급 및 계약대금을 납품 후 즉시 지급하는 등 정부의 재정 및 조달사업 조기집행에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구미시는 하반기 조달요청시 조달수수료의 10% 할인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 2009년 하반기 경제 전망

정성민 편집위원

하반기 국내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반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2%를 기록, 상반기(-3.4%)와 달리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정부 소비진작 대책과 가계심리 호전 등으로 0.3% 성장해 상반기(-3%)보다 3% 가량 성장 할 것으로 분석된다. 설비투자는 상반기 -20.9%에서 하반기 -9%로 개선되고 수출도 2.7%의 성장세를 보여 상반기(-9.2%)보다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취업자수는 기업구조조정과 영세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상반기(9만)보다 줄어든 7만여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2.5% 상승할 것으로 보여 올 연평균 상승률 2.9%를 밑돌 전망이다.

## 1.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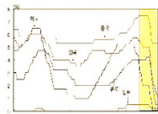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부실자산 확대, 동유럽 금융불안, 정책 기조 전환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도 적지 않다. 금융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 영향으로 모기지, 소비자신용, 기업대출 등 만기보유(hold to maturity) 신용자산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의 금융불안이 서유럽 금융기관의 손실확대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 2. 세계경제 개선 조짐

□ 세계경제는 각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등으로 점차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정책 구속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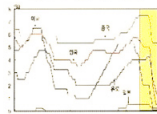
실업률 및 저축률 상승, 유휴 생산능력 등이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 정책금리 조정



자료 : Bloomberg

주요국 재정적자 규모



자료 : IMF (2009. 6월)

○ 주요 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금년중  $\Delta 1\%$ 대에서 내년중 2%대의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이행과 非OPEC의 생산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세계	선진국	신 흥 시장국			중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2008년		3.1	0.8	1.1	-0.7	0.8	6.0	9.0
2009년	IMF	-1.4	-3.8	-2.6	-6.0	-4.8	1.5	7.5
	World Bank	-1.7	-4.2	-3.0	-6.8	-4.5	1.2	7.2
2010년	IMF	2.5	0.6	0.8	1.7	-0.3	4.7	8.5
	World Bank	2.8	1.3	1.8	1.0	0.5	4.4	7.7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늘어나고 투자자금도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높은 재고수준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와 같은 급등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원자재가격도 생산업체 감소,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예로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실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3월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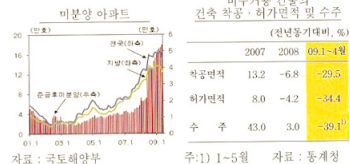
#### 4. 소득여건 개선 지연 및 예비적 저축유인 강화

□ 지난해 4/4분기 이후 악화돼 온 소득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임금이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감소되는 것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 5. 투자심리 위축 및 민간건설 활동 부진

□ 향후 경기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업종의 가동률이 과거 평균 수준을 큰 폭 하회하는 등 하반기 들어서도 가동률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건설도 미분양 주택 적체, 사무용건물 수요 감소, 대형복합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 착공·허가면적 및 수주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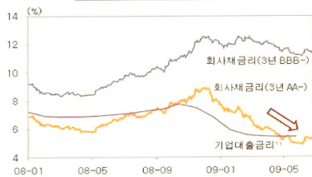
	2007	2008	09-1~4월
착공면적	13.2	-6.8	-29.5
허가면적	8.0	-4.2	-34.4
수주	43.0	3.0	-39.1

주: 1) 1~5월 자료: 통계청

#### 6. 금융시장 안정 및 자산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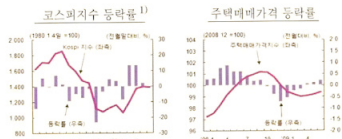
□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대출금리, 우량회사채 금리가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전보다 낮아지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 회사채 및 기업대출 금리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 그동안 하락세를 나타냈던 주가 및 주택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는 최근 저점(3.2일)대비 약 40% 상승했고, 주택가격도 4월 들어 오름세로 반전됐다.



주: 1) 월말 기준

#### 7.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정부는 가계에 대한 정상이전 확대,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일부 보전한다. 소득세를 인하, 소득공제해도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가계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난 6월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7조원 규모(목표인원 25만명)의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시행했다.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금융, 세계면에서의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제3차 민·관 합동회의 09.7.2일)

○ 정부, 국책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설비투자펀드 설립 등을 통해 최대 20조원의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향후 5년간 R&D 재정지출을 연평균 10.5% 확대할 계획이다.



♣ 프로필

- 1935년생
- 경주고 졸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성북구청장
- 서울특별시 교통국장, 감사관, 내무국장
-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장
- 서울특별시 부시장
- 한나라당 국회의사무원
- 경주시장(현)

## »»COVER STORY 백상승 경주시장

신라 천년고도 경주가 새로운 천년을 설계하고 있다. 경주는 '21세기 동북아 역사문화, 첨단과학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준비 중이다. 시민화합의 힘으로 이뤄낸 방패장 유치와 한수원 본사 이전 등 굵직한 국책 지원 사업과 새롭게 단장하는 역사문화도시, 첨단과학도시 기반조성은 '새로운 천년 활기찬 경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라천년 이후 최대의 호기를 맞이했다는 고도 경주, 백상승 경주시장을 만나 경주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글 / 조종성 편집국장 · 사진 / 이준혁 기자



## 1. 민선4기 3주년을 맞는 소감과 비전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선 3주년을 맞아 경주시는 시정 방침을 '새로운 천년 활기찬 경주'란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역사문화 도시조성사업과 3대 국책사업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경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최대 역점사업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일정교 복원 착공을 시작으로 황룡사 복원 홍보전시관 건립, 황룡사 9층 목탑 모형 등을 제작 중입니다. 또 조선시대 전통한옥마을인 교촌한옥마을, 도심속의 특화거리인 봉황로 문화의 거리, 쪽샘지구 정비 등 신라 유적지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라 탐방길 조성, 경주읍성 정비복원, 남산 정비 등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복원해 경주시를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3대 국책사업 추진도 핵심과제입니다. 특히 경주시민의 힘으로 유치한 3대 국책사업인 방재장 건설은 지역 주민 고용증대를 위해 '국책사업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지역업체주주 및 지역장비 사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경주에 유치되면서 한수원 본사와 함께 내년 7월까지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도 1단계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올해 기반공사를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경주가 전국 제일의 휴양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투자 계획은 무엇입니까?



▶ 경주문예회관 조감도



▶ 월정교 조감도

문화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 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숙원인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문화도시에 걸맞는 대규모 문화공연을 유치하고, 유적지를 활용한 문화공연 등 특색있는 문예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암지를 비롯해 다양한 유적지에 야간상설공연을 개최해 야간 불거리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셈이죠. 관광분야에서는 역사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과 방영에 맞춰 선덕여왕 관련 유적지 테마관광, 선덕여왕 행차 재현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이 크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울러 농촌형 체험관광을 위한 안강옥산 세심마을, 양남시대 산에들레마을 등 농촌테마마을을 육성해 관광객 증대는 물론 농가소득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체육분야는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경주 동아국제마라톤대회, 빛꽃마라톤대회와 축구, 태권도 동계훈련 유치 등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공원 조성, 경주생활체육공원, 복천생활체육공원 등 체육기반시설도 구축해 전국 제일의 레포츠 휴양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3. 경주시는 전국 230개 자치단체의 최고의 영예인 '제1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전국 지자체가 경쟁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전 분야에 걸쳐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상을 차지한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30만 경주시민과 1,500여 공무원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주시가 신라천년 왕국의 찬란한 문화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3대 국책사업 유치로 새로운 천년 비전을 열어가길 노력을 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방매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 5,252억원 확보와 서천, 북천, 황성공원 체육·휴식공원 조성 및 안압지, 동부사적지 일대 꽃단지·야간경관조성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전력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지역경제 회복과 기업위기 해소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수출 공동마케팅,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의 기업에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공무원 1인 1사 후견인제 등의 현장밀착행정으로 기업 활동지원을 강화한 것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창출을 위해 의동, 천북, 건천 등의 지역에 3개 산업단지가 조성하면서 3개의 대기업을 유치했고,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8,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도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천년고도와 살기 좋은 첨단과학도시,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 경주는 한우 농가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축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 분야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 경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황룡사 모형도

경주의 한우 브랜드인 '천년한우'는 전국한우능력 평가대회 육질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미 대도시마다 판매망을 구축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의 배합사료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청보리, 호밀 등 조사료 재배를 대폭 확대해 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우수 센터로 선정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운영하면서 생산자 판로의 걱정을 덜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삭' 공동출하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농산물 수출 촉진지원, 농어민회관 건립 등으로 농업 선진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농업기술상 대상을 수상한 기능성과일 가바(GABA) 등 농산물 품질 고급화사업,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등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수산업의 경우에는 경쟁력 확보와 관광형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수산물 냉동공장은 물론 수산인회관, 활어유통센터 건립, 참전복 특산화단지조성, 어항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고유가, 수산물 개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 유류 지원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 5.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의 경주 이전을 비롯한 3대 국책사업 추진과정과 전망은 어떨습니까?

한수원 본사는 법정시한인 내년 7월까지 경주로 이전토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권역에 '가칭' 한수원 타운을 건립해 2천여 세대의 직원주택과 국제회의를 개최할



▶ 안압지 야경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두산중공업 이전과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한수원본사와 연관업체, 양성자 가속기와 관련한 연구인력 등 수많은 고급인력이 경주로 유입되도록 시장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양성자 가속기사업을 비롯한 연관산업단지는 2010년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첨단소재산업과 의료연구단지, 동해안에 조성하는 원자력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클러스터와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과학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 6. 경주는 사회복지, 친환경 사업에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 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소개해 주신다면?

경주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천연가스 청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해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건강 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 문화 변화로 화장수로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화장장을 초현대식 종합장사시설로 조성했습니다.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또, 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 세대에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전세자금 대여, 사랑의 집짓기 등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출산장려금 지급, 아이돌보미 제도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기

초노령연금 등 고령자를 위한 제도적 복지시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립노인요양병원 및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립으로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과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 노인 여가생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장 대회의 광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열린행정을 통한 시민들의 시장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6년 당초예산규모 4,967억원에서 2009년 당초 예산규모 8,800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 7.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주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6년 전체예산 4,967억원에서 2009년에는 8,800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괄목할 성장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경주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시민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시민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한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경주가 새천년을 21세기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활기찬 경주' 건설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혼신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주 시민의날 기념 시민화합 줄다리기 대회 모습



#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및 활용방안

이준형 편집위원

## 우리민족에게 백두대간이 가지는 가치



우리민족에게 백두대간이 가지는 가치는 크게 인문지리적 측면, 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문지리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백두대간, 정간, 정맥을 산계(山系)의 연속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 국토에 대한 지리적 일체감을 갖게 하였고, 유역을 가르는 분수계(分水界,

watershed)로서 국토 공간구조의 골격이자 생활영역과 문화양식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적 측면에서의 가치로서 백두대간은 때묻지 않은 자연으로, 귀중한 동식물과 그들이 안심하고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연결된 산줄기들은 각종 야생 동식물의 이동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 삼, 담비, 수달 등 백두대간에서 서식하는 포유류는 15종, 대부분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대상 종이며, 한반도 전체의 35%인 4,191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 백두대간 훼손 실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과도한 산림자원 수탈, 광복 이후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로 산림 황폐화가 아주 심하였다. 이에 1970년대 초부터 나무를 심어 산이나 들을 푸르게 하는 치산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우리 산림은 30여 년 동안 노력으로 녹화되었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이용과 개발로 계속 사라지고 있다. 또 개발과 이용 후에는 복원 없이 방치해 됨으로써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1976년부터 2003년까지 206,823ha의 산림이 줄어들었고, 최근 급속한 세계화, 도시화, 산업화, 난개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만 해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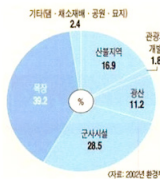
11,000ha나 되는 숲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등허리를 이루고, 우리 강산의 뿌리가 되는 백두대간(白頭大幹) 1700리. 휴전선 인근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생태계의 보고(寶庫)'가 울창한 삼림을 파먹은 석회석 광산과 채석장, 평균 8km마다 하나씩 나타나는 횡단 도로, 발전소와 농업용수 댐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이처럼 백두대간은 기존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훼손지가 이미 광범위하게 곳곳에 퍼져있으며, 또한 백두대간 내에 있는 훼손유형 중 상당수가 대규모 훼손지이며, 지형자체가 변화되었으며, 백두대간 내에 발생한 훼손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다른 훼손유형과 맞물려 발생하는 복합적 형태로 변화가고 있어 더욱 큰 훼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훼손지에 대한 방지와 부실한 복원으로 인한 재훼손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급히 백두대간 훼손지를 복원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복원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동향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환경 문제는 산림생태계에 영향과 피해를 줄 것이며, 건전한 산림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은 국가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생물종다양성협약(CBD)에 의한 생물자원 주권의 인정으로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생태계 보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경제의 추세가 전통 제조업에서 IT·BT·ET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태계의 보존은 국가경제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수립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에서 백두대간의 자연과 민족정기를 온전히 보전하고 생태·문화·경제 가치 제고를 목표로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제

## ▶ 유형별 백두대간 훼손 실태



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생태적 관리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이 발표한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에서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목표로 산림환경 보호체계 확립에 두고 있다. 따라서 반만년 한민족 역사와 함께 국토 공간구조의 골격이자 생활영역과 문화양식의 기반이 된 백두대간을 잘리먹은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과 활용으로 민족의 정기 보전과 한민족 혼 문화 재생을 위한 가치 '백두대간 Eco-PROJECT'를 제안한다.

## 『백두대간 Eco-Project』제안

본 저자가 제안한 가치 '백두대간 Eco-Project'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 전략에 부응하여 대구경북의 감성자원인 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7대 핵심 프로젝트 중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에코비즈니스 기반구축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백두대간 에코비즈(Eco-Biz)프로젝트』구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중의 백두대간 에코비즈(Eco-Biz)프로젝트에서의 백두대간은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축으로서 인문지리·문화·식생 등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개별사업을 계획하였지만, 백두대간의 보존 필요성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발시킨 『백두대간 산림과괴(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 및 활용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백두대간의 우수한 생태자원지역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백두대간내 산림과괴(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과 활용방법을 중심테마로 하는 『백두대간 Eco-Project』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백두대간 Eco-Project는 영구적인 생태복원이 불가능해진 백두대간내 산림과괴 현장에 대한 선례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탄산지석으로 삼고, 백두대간 우수한 산림생태계와 훼손지 복원 및 활용을 연계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중간지점의 특정 산림훼손지에 1단계로 국립 산림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폐

채석장의 산림과괴 현장을 국립 산림문화테마파크로 복원·조성함으로써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걸맞는 산림생태계 복원을 활용한 휴양·생태관광산업의 메카로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백두대간 Eco-Project의 1단계 사업인 국립 산림문화테마파크의 역할은 백두대간 산림훼손 역사적 보전과 홍보 장소, 훼손지 생태복원 연구 및 모니터링 현장 연구시설, 버려진 산림훼손현장을 활용한 환경 재생(치유)복구방식으로서의 발상 전환 시범모델,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낙후 탈교 등이다. 국립 산림문화테마파크 조성의 최적 입지조건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상징성과 효율적인 접근성(광역 및 지역교통망) 및 백두대간 대표적 산림훼손 현장을 지역내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우수한 자연생태 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백두대간 자연생태계와 산림훼손현장을 활용한 『국립 산림문화테마파크』 조성 방향은 인간의 감성을 풍요롭게 만드는 환경을 재생(치유)하는 복구방식으로서의 발상 전환을 통해 백두대간 생태와 버려진 산림훼손현장 및 또 다른 경관을 소재로 하는 『생태복원, 휴양관광, 레포츠 관련 클러스터』이자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의 시범모델로 추진하는 것이다. 독일, 캐나다, 브라질 등의 사례를 볼 때 폐광석장이나 채석장을 활용하여 환경을 재생(치유)하는 복구방식으로 발상전환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사례보다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훼손된 산림의 생태 복원은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이며, 특히 채석장의 경우 현대의 산지보전기술로도 영구적인 생태복원이 불가능한 영역이며, 부분적 복원도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버려진 것을 재활용한다는 자원활용의 극대화라는 측면이 크며, 백두대간의 산림훼손현장이 가지는 또 다른 백두대간내 경관으로서의 의미를 창출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중인 산림의 보전, 문화, 휴양의 복합단지화를 달성하고, 자치단체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장 마련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미디어 관련법 통과 논란

편집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다. 아권은 일제히 사상 유례가 없는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 논란은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PTV법) 등 4개다. 당초에는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도 논란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마쳐 현재는 대상에서 빠졌다. 이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인 신문법과 방송법 등 2개 법안만 통과됐고 나머지는 유보됐다.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는 후폭풍과 함께 치열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 관련법의 이슈를 쟁점별로 살펴본다.



▶ 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

### ▲ 방송법, 신문-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 소유 허용 여부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금지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프로그램공동체(PPTV)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분 소유를 지상파는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조건은 구독률(전체 가구에서 특정 신문을 보는 가구 비율) 20% 미만이다.

하지만, 현재 구독률이 20%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어 모든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종편·보도채널의 경우 초기 투자금만 3000억~6000억원의 기량 등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조건·중앙·동아일보에만 방송을 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방송에 진출할 수 있어서도 기존 법으로는 자산 10조원 미만의 기업만 가능했지만, 이 조항은 삭

제됐다. 이로 인해 신문과 대기업이 결합하면 지상파 20%, 종편·보도채널은 6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허용도 논란이다. 법안은 외국인에게도 종편의 20%, 보도채널의 1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했다. 방송의 1인 소유지분 한도를 30%에서 40%로 높인 것을 두고는 방송의 사유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신문법, 신문사의 방송 경영 허용 여부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상호 공동경영을 할 수 있고, 종합 전문편성 방송사업의 경영 역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일간신문이나 방송사가 다른 일간신문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려났다. 대형 언론사들이 지역신문 등 규모가 작은 신문사들을 인수하는 것도 허용됐다. 지역 언론이 고사하고, 여론 다양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일간신문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분류하는 조항을 없애, 매체 규모에 관계없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을 신설재단에 맡기게 된다. 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갖게 되고, 언론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정부가 갖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금 지원을 이유로 신문사들을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사이버 보안도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



▶ 디도스공격에 대한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브리핑 장면

지난 7월 7일에 시작된 사이버테러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은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트렸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기관 등 26개의 사이트가 접속 장애를 일으켰고, 악성코드에 감염돼 공격에 동원된 '좀비PC'가 사이트를 마비시켰다.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에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겪은 것이다.

이번 사이버 테러는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주요 국가기관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디도스 공격을 시도한 배후세력은 분명 공격이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들 배후 세력들은 앞으로도 언제든 국가의 주요 전산망을 파괴시키고 훨씬 큰 피해를 입히는 등 더 큰 테러를 전개할 지 우려스럽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발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지금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과오를 다시 한 번 범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정부 IT분야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산업보안 기술개발 등 보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도 "이번 사

태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보안 분야에 IT 예산의 10%를 투자하는데 IT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1%에 불과한 예산으로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보안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보안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고도의 전문성과 수사력이 요구되는 보안 기술과 능력을 갖춘 보안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사이버 공격'을 신속하게 방지해야 한다. 또, 이번 사태에서 보듯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우왕좌왕했던 정부는 관련 부처와 연구소 등 유사시 이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테러 발생시 신속히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사이버 관련 법제에서는 정보 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초동단계에서 이를 신속히 추적, 범인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사이버 위기관리법(안)을 조속 심의해 관련 법제도를 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 테러'는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나 개인용 컴퓨터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공격해 올지 아무도 예상치 못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의 새로운 한 부분으로 인식돼야 하며 국가의 안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 경찰이 수거한 좀비PC 하드디스크



## »»» 도심 공공디자인은 도시 경쟁력이다

우성덕 취재팀장

대구의 도심이 바뀌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문화의 향기가 흐르고, 예술의 디자인이 도시를 입고 있다. 지역 최대의 변화가인 대구 중구 '동성로'는 불법 노점들이 자취를 감추고,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산뜻한 거리로 거듭났다. 중구의 중앙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돼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중이며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 대구 3.1운동 길

###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대구 중구 동성로가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로 변하고 있다. 대구시와 중구청이 추진해 온 동성로(대우빌딩~대구백화점 간 760m)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사에 접어들었다. 동성로에는 상설야외무대가 마련됐고 보도블록은 모두 교체됐다. 노점상이 있던 곳에는 가로등, 벤치가 들어섰고, 옛 음식이 있던 곳에는 상징물과 표지가 설치됐다. 동성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알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거리로 다시 태어났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된 중앙로(반월당 사거리~대구역)1.05km 구간도 걷고 싶은 거리로 맛을 내고 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은 25% 정도다. 이곳에는 10개의 공간으로 나눠 축적, 문화 등 다양한 주제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조형 분수, 거울 분수 등도 설치되고, 중앙 치안센터 부근에는 대구 모 야외무대와 바다분수대 등을 갖춘 '축제의 장'이 꾸며진다. 특히 '대구지하철방화' 참사 현장인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부근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과 사고 당시 배출된 연기를 형상화한 안개분수를 설치, 안전사고의 교훈도 되새긴다.

###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대구 도심과 골목이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대구시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프로젝트다. 중구 수창동 옛 KT&G 담배제조창 건물과 터(4,613㎡)를 세단장하는 이 사업은 지하 1층,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2,150㎡의 규모로 국제창작스튜디오, 전시관, 문화교류센터, 레저공간 등이 갖춰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심 속 웅물스러운 공간으로 방치돼 온 이곳을 국비와 시비 등 150억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 2011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중구 계산동, 동산동 등 역사 유적이 만남 있는 골목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도심재생 프로젝트'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1000여 개가 넘는 대구 시내 골목 골목마다 숨어 있는 옛 이야기를 끄집어 내 관광 자원화하는 프로젝트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골목마다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조경 작업을 벌여 거리 디자인을 개선해 관광



▶ 대구 수창동 옛 KT&G 건물





▶ 이상화 고택 전경

상품으로 활용한다. 이미 시는 일제강점기 저항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상화 시인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 선생 등의 고택도 새롭게 복원,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중구청은 대구 근대화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중구 북성로와 북성3길, 수창1길 도로변,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등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역사 박물관은 물론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 어가(御駕)길을 복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대구시와 중구청은 이 사업들과 연계해 '대구의 인사동'으로 불리는 봉산문화거리를 인도폭 확장과 교통환경 개선으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고,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쇠퇴한 방천시장의 빈 점포를 작가들의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2009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는 등 도심 재창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도심 재창조, 성공의 열쇠는 주민 손에

도심 디자인에 대한 고민은 대구시와 중구청,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도



▶ 동성로 공공디자인 조감도

심 재창조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는지부터 묻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만 펼친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도시들은 도심 재창조를 추진할 때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어떻게 성장과 퇴보를 가져왔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실행기구나 조직을 만들고 법, 제도를 정비한 뒤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는 과정이 '도심 재창조'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디자인을 시민들에게 설계 공모 및 현상 공모하고, 대전시가 도시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창조, 유지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로 구성된 '도시디자인 포럼'을 발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주민 참여가 공공 디자인 사업의 유지 및 관리에 꼭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예술이 단지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면 목적과 당위성은 상실하게 된다. 도심 디자인을 위한 기획-설계-시공-관리까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모래에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공산이 크다. 주민 참여는 실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수단이고, 주민 참여 시스템을 발굴하고 구축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민의 삶을 미화시키기보다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경상감영공원



大邱慶北中小企業廳長 尹道根

## 》》인물포커스 윤도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 중심의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제14대 윤도근(56)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난 6월 1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 갔다. 윤 청장은 부임 후 각 유관 기관과 산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지역경제가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침체되어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역경제 회복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윤 청장을 만나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원방안과 생존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글/우성덕 취재팀장

### 대구경북 99.9%가 중소기업, 체질 개선 반드시 필요

윤 청장은 지역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타 지역보다 대구경북 훨씬 더 침체되어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역의 활력회복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의 구조적인 측면과 기업의 경영실태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대기업 등 완제품 생산 기업이 적고, 영세 수급기업 비중이 높아 주요 모기업이 타격을 받는 경우 지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윤 청장은 "대구·경북지역은 전체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주체이다"며 "제조업 중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업종 등 주력업종의 성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이 좌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모기업들이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을 하는 기업이 많아 중소 수급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말 세계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의 침체로 최근 주요 모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급기업의 타격이 커지면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투자가 줄어들다가 올 2분기부터 일부는 되살아나는 추세다"며 "하지만, 대구경북지

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설투자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모기업의 매출에 따라 지역경제가 좌우되기 때문에 모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그는 경쟁력 있는 중견 모기업 육성, 대기업 유치, 모기업제품 매출증대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차별화 지원, 녹색성장 강화

윤 청장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차별화된 지원전략과 녹색 성장 전략 강화를 꼽았다. 그는 "업종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중적 처방이 아닌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전개해야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녹색성장 전략강화를 위해서도 소재부문, 제조공정부문 그리고 사용 후 폐기를 재활용 등 각 부문에서 친환경적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 중에는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벤처기업 등 성장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를 위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 및 지자체 역점 추진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의무구매를 강화해 내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 유망기업을 발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한 구 청사를 리모델링해 혁신기업 육성센터로 개편,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예비 혁신기업을 키워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미래성장 동력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한, EU FTA 발효 대비, 현장중심 사업 펼쳐 나갈 것

윤 청장은 한, EU FTA 발효에 대비한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그는 "부품의 품질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중간제품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는 부품을 생산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각각 생산한 부품을 조합해 모듈화된 제품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연관되는 동종 또는 이업종간의 기술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품질혁신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올해에는 3개 그룹, 9업체가 모듈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업체를 모집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이 피부에 닿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윤 청장은 "대규모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가려운 곳을 제 때 긁어주는 현장중심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금 마련 중인 중소기업 활력회복 대책 수립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제구조 내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전개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기업 유치 등 건설한 지역 경제구조 확충 기반 강화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대구경북총기청 현장 방문상담 모습



## 》》》 비정규직법 논란,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홍순대 기자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 사용자 등 일부는 이 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바람에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며 1년 6개월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라는 게 주된 논리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량해고 사태나 정치권이 사용기간 제한 유예 시기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 비정규직법, 고용 안정성 해쳐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장'을 목적(제1조 1항)으로 하고 있다.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고용계약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과 대우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가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의 논란은 '비정규직 고용자는 근속기간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처럼 2년 전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제정된 법이 오히려 지금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에서 조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인력 구조 조정을 준비 중인데, 열악한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말할 것도 없다. 기업 입장에서 2년 동안 업무 능력이 향상된 비정규직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손해지만,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거나 사용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명분만으로는 지금의 비정규직법 논란을 풀 어낼 수가 없다.



▶ 비정규직법 개정안 반대 집회

### 비정규직법 단기 처방에 불과, 사용자유 제한해야

비정규직의 고용 기한을 늘리거나 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기간제한 유예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2년 제한'이라는 규정만으로 비정규직의 양산과 해고 사태 방지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얼마든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지난 2006년 비정규직 입법에서 빠진 '사용사유 제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일상화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을 늘려 고용안정을 달성한다는 목적에 맞게 상시직 근로는 반드시 정규직만 할 수 있도록 사용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은 기업에 임금인상 요인이 거의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사용자유 제한과 기간제한을 일정 기간 병행하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사용자유 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비정규직 문제, 법 개정이 아닌 근원적인 처방 필요

비정규직 차별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경제발전에도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업에선 보면 비정규직 채용이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나라 경제 전

체를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부가 치러져 하는 사회적 갈등의 손실과 빈곤층 확산 등에 따른 구제 비용을 따지면 손실이 훨씬 크다. 경제학에서도 부정적 외부효과, 즉 개별적 효용의 총합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큰 경우를 '외부 불경제'라고 지칭해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을 비판하는 경영계도 적지 않다. 직원들이 조직을 신뢰하고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게 주된 설명이다. 이에 금융이나 유통, 제조업 등에서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곳이 적지 않다.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제정 뒤 2년간(2007년 3월~2009년 3월) 전체 비정규직 수는 40만명 줄어든 대신 정규직 수는 72만명 증가했다. 이는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의와 정규직 직원들의 양보로 함께 공생하는 자세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과 함께 풀어야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엮여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이 약하다보니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선 항상 첫번째 희생양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이기주의가 담겨 있는 탓이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0% 안팎에 불과하지만, 이런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힘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정규직은 강력한 결속력과 노조의 힘으로 높은 인건비를 이어가게 되고, 이렇게 생산성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처

(6월30일 계약 만료  
기간제 노동자 379명 대상)

계약 해지 (217명)	
한국도로공사	22명
대전주택공사	31명
한국도지공사	145명
한국물리력	19명
정규직 전환, 고용 유지 등 (162명)	
인천항만공사	18명
한국광물자원공사	1명
수원시시설관리공단	30명
수자원기술원	10명
대구시설관리공단	100명
군포시청스낵수련원	3명

※공공부문 기관·사업장 73곳 조사 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없는 임금 상승을 이어가다 보니 사용자측은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게 됐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의 양보에서 출발해야 풀릴 수 있다는 공생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비용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병행되지

않은 채 법으로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기 어렵다. 경직된 노사관계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비정규직 해법의 또다른 방안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금까지 비정규직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만이 해결의 능사는 아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정지권이 다툼을 하는 법 시행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리 없는 계약 해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법 문제를 처리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국회 한노위 소속 의원들과 민노총·한노총 사무총장들 간 비정규직법 논의 모습



## » 하반기 부동산 시장 소형, 전원주택은 인기몰이

장경태 기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오리무중이다. 뚜렷한 회복 징후도 정책 변화도 예측할 만한 변수가 없는 탓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도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실물 경기하락으로 부동산 거품은 더 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는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물경기 회복 여부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하반기의 대표적인 변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 하반기 회복세 불투명

올 상반기는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주요 경제 지표의 호전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았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저점 매수가 이뤄졌고, 정부가 경기 부양과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규제완화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도 국지적인 회복세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4월 말부터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 등 신규 분양시장이 성공적인 초기 분양을 마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하반기 시장 회복을 확실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 한강변, 신역세권, 업무지구, 인기학군 등 지역적 선호지역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일부 지역은 울 들이 하락세를 보인 곳이 여전히 많다. 상반기 국지적인 바닥론이 불거졌지만, 회복세 확산과 거래시장 정상화를 예상하기 어려웠다.

이는 하반기에도 국지적인 수요 움직임과 선도 지역의 가격 정체를 예상케 한다. 전반적으로 보합 장세가 이어지며,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인 실물경기의 뚜렷한 회복 징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하반기 부동산 투자는 경기 여건을 주시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여유지역이 있는 경우 사업이 가시화된 재건축, 재개발, 거점 개발지역에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소형 내집마련 수요자라면 하반기 나오는 급매물 위주로 접근하고, 인근 개발 호재나 교통 환경이 개선되는 곳을 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새 아파트 분양의 경우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물량을 고르고, 지역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 효과가 뚜렷한 지역을 골라야 한다.

### 하반기, 소형 주택을 주목하라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소형 주택이 뜨고 있다. 반대로 자금마련 부담과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동안 주택시장을 주도했던 중대형 주택의 인기는 식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시장

의 경우 2003년 이후 중대형이 아파트 상승세를 주도했지만, 2007년부터 전용 60㎡(20평)이하 소형이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 중대형으로 쏠렸던 내집마련 패턴이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다시 소형으로 바뀌고 있다. 소형주택의 인기는 분양을 앞둔 아파트 시장에서도 높다. 지난 5월 말 한국갤럽과 부동산 114가 전국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형주택보다 소형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분양을 받을 때 전용 85㎡(27평)이하 소형주택을 원한다는 응답이 2006년 말 조사에 비해 늘었다.

특히, 50대 이상은 응답자 중 23.4%가 소형주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다음으로 소형주택 희망율이 높았다. 고령화, 은퇴인구 증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소형주택 실수요가 늘고 있고, 수익성 투자재로 접근하는 고령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규분양시장에서 소형주택이 꾸준한 수요를 보이면서 건설업체들도 다시 공급 비중을 늘리고 있다.

1-2인 가구가 많은 대도시 도심지에서는 이런 현상이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상업 인프라가 뛰어난 도심 소형주택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의 공급불균형이 심화되면 가격 강세 현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가구 증가와 소형 주택의 인기 현상은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 계획과 투자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속있는 소형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환금성이 뛰어난 역세권 소형 주택의 경쟁력은 커지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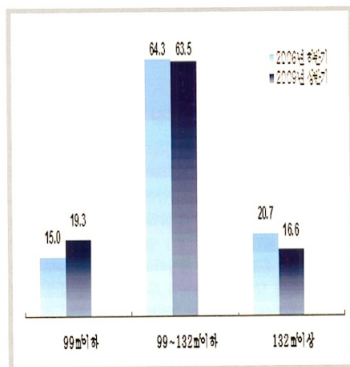
### 전원형 '소형' 주택 주목

중장년층 부동산 투자 희망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동산은 전원형 소형 주택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또는 지방 중소도시 근교에 땅을 매입해 소박한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중장년층들의 욕심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서 매년 빠지지 않는 게 은퇴 후 도시와 멀지 않은 전원용 부동산을 장만해 소형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공통된 소망이다.

대도시 근교 땅값이 크게 내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수요자들이 여윌돈으로 땅을 여기저기 사두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씩 땅에 적금하듯 물어두려는 것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향후 주택의 투자 가치 감소로 인해 대도시 인근의 소형 주말, 전원주택은 향후 꾸준한 인기를 끄는 투자 대상으로서 부상할 여력이 크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도시나 외곽 도시는 성장보다는 수요 급감으로 인해 투자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은 높다.

향후 전원 생활에 관심이 높은 만큼 대도시 인근 농가주택이나 농촌문화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분양하는 택지, 출퇴근형 농촌주택 투자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쉽게 개정한 정부의 농지 정책과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은 소형 주말주택 만들기를 도와주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수요 촉진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 2006년, 2009년 중소형주택건설비용



## » 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 대구 '희망자전거제작소'

대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희망자전거제작소'. 2007년 11월 대구YMCA 내의 사업단으로 출범한 사회적기업이다. 폐자전거를 재활용해 새 자전거를 생산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자전거를 통해 환경도 지키고 교통문화도 바꾸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글·사진 / 우성덕 취재팀장

### '희망자전거제작소' 시민 발걸이 이어져

'희망자전거제작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말끔한 자전거를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국적으로 붐고 있는 '자전거 열풍'에 힘입어 이곳의 존재감은 높아졌다. 지난해만 1,300여 대가 팔렸고 올해는 2배 이상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원들도 44명으로 문을 연 당시 20여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재활용 자전거에 문제가 생겨 구매자들에게 항의를 받기 일쑤였다. 낡은 타이어 때문에 '헝크가 낫다'거나 '자전거 도색, 체인' 등 직감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전거를 만만하게 보고 쉽게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실패의 원인이었다. 버려진 자전거들을 분리해 멸망한 부품만을 골라 새로 조립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런 자전거가 쉽게 잘 팔릴 리가 없었다. 1년 여가 지나자 이런 시행착오도 살이 되고 피가 됐다. 지금은 진짜 '새것' 같은 자전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만큼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향의도 줄어들었다. 과거 자전거 공장을 운영했던 기술자를 모셔다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기술력도 높였고, 자전거 부품의 80% 이상을 새 부품으로 교체해 생산하며 위기를 극복해갔다. 희망자전거제작소 박재운 사무국장은 "녹색 성장이라는 화두가 자전거의 인기로 이어지면서 판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못 쓰는 자전거를 수거해 계속 재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거할 자전거가 요즘에는 적어서 걱정이다"고 말했다.



## ▶ 희망자전거라이프



▶ 자전거 조립 공정

### 희망자전거 '타운바이크, 아트바이크'

'희망자전거제작소'의 핵심 사업은 '타운 바이크 사업'이다. 디자인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높여 탄생한 것이 '레저형' 타운 바이크(Town bike)다. 국내 자전거 시장이 중고가 레저, 스포츠형 자전거 중심으로 바뀌면서 '타운 바이크'는 저가형으로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 계획이다. 희망자전거제작소는 이런 재활용자전거를 대당 5~6만원 선에 판매하고 있다. 수십만원 이상을 넘는 일반 자전거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4만원 선에 비해 1만원 이상 올린 가격이다. 지난해에 비해 제조 단가가 상승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 자전거 부품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판매가도 인성했다. 이처럼 부품 수입가에 따라 '타운 바이크'의 가격도 결정되는 탓에 안정된 수익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다. 폐자전거를 수거해 새로 조립하는 작업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자전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부품값이 오르면서 자전거 가격도 인상될 수 밖에 없었다"며 "폐자전거를 일일이 수거하는 일도 어렵고, 폐자전거도 많이 줄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고안해 낸 사업이 '아트바이크(Art bike)' 제작이다. '아트 바이크' 사업은 생강나무, 산호초, 키높이 2단 자전거 등 새롭게 디자인한 예술 자전거를 만들어 거리 공연, 퍼포먼스 행사 등에 대해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고 있다. 또, 특색 있는 자전거 거치대 제작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지하철역에서 보아온 친편일족적인 자전거 거치대를 장소와 주제에 맞게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변용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 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

'희망자전거제작소'의 직원은 44명.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

등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취약계층이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국회도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사회적 기업지원법안'을 마련,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는 재활용품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 일하는 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 있다. 전국적으로는 244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희망자전거제작소'처럼 일부 사회적 기업은 이미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희망자전거제작소 박계은 사무국장은 "지난 2007년 11월 문을 연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수 없이 겪어왔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하지만, 많은 사회적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과 자선단체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조직의 장점을 잘 계승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조직의 단점이 조합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지원 없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여전히 힘들다. 최근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과 함께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및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 자전거 시험 공정



▶ 완성형 자전거 보관소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 1.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답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용 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의 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제124조제1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 각 호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각각 2년에서 5년까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법 제1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133조제1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42조).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항), 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토지의 이용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지만(제3항), 같은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4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제5항).

하지만, 이행강제금의 부과 종료시점과 관련해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계산할 때, 허가받은 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도 이용의무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기간의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의 지속적인 기간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을 “토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그 이용의무기간을 각각 “2년, 3년, 4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기간의 산정에는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은 그 기산점인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각각 2년 내지 5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이용의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당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지난 때에는 토지이용의무는 종료되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하고 나서 당해 토지이용의무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관련

### 1.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 2.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모든 토지 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이유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고, 인감중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등용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의 일부에게만 알린 후 동의 여부를 물어도 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으로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의 일부에게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도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고지(告知) 및 동의 절차를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그 구성에 대한 시장·군수의 승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보아야 할 대상이 반드시 모든 토지 등 소유자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권자로서는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객관적으로 갖추었다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 즉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 률

### 정부 조달사업 대지급 대상 확대

정부 조달사업의 대(代)지급 대상이 효율성을 감안해 소액계약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등 정부 조달사업 참여업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 대지급 대상을 납품업체 규모나 계약방법,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대지급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모든 단가 계약과, 총액계약 중 소액계약 등으로 확대된다.

대지급이란 수요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지급하는 것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가 잦은 물품의 단가를 정해 조달청이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운용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내역과 제공방법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 국토부, 감리·공사관리방식 다양화 추진

앞으로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등 다양한 형태의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전적격심사(PQ)평가에서는 기술력 평가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 최저 공사비 확보, 공기 단축 등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리·건설사업관리(CM)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획일적인 책임감리 방식 적용을 탈피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자신의 역량과 공사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CM 적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공사관리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조물의 규격 확인, 품질 시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 등급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리회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선정 제도가 개선된다.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정부가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국유재산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국유재산법의 시행일인 오는 31일에 맞춰 공포, 시행됐다.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엔 ▲국유재산 중 증권의 매각 가격 등을 결정키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증권매각소위원회를 운영하고, ▲판결이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할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도 사용자 면제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유찰로 인한 유휴 국유재산 발생을 막기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최저 사용료(대부료)를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경작용 및 주거용 국유지 사용료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민간도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가능

2010년 초부터는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과 손잡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만 택지개발사업 시행이 허용되고 민간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에 택지개발 허용을 추진해 왔으며 1단계로 공공기관간 경쟁, 2단계로 공공, 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3단계로 완전경쟁을 계획했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결정된 상황에서 공공기관간 경쟁은 무의미해졌으며 2단계인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동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방식이나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민간 시행자는 참여지분 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 성실히 돈 갚는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금지

앞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주택 등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민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았다면 집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 친분 때문에 보증을 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금액이 파산했을 때 액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채권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에 대한 변제계획을 세웠을 경우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

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회생에 도움이 된다면, 신청 이후라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4대강 인근 토지수용 근거 마련

앞으로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인근 토지가 국가에 수용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4개 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법 통합과 동시에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했다.

통합법은 거주자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매수가 가능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천변 50m 내의 땅을 최우선매수구역으로 보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매수와 생태복원 등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기구(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도 넣었다. 또 4대강 수변구역 내 난립한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다른 숙박업과 음식점의 형평성을 고려해 농촌형 민박사업의 입지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고시로 운영되던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정도 법률로 상향 조정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입찰 중도포기 업체 입찰 자격제한 1개월로 완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할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위기에 따라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능력과 관련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를 낸 뒤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1개월만 지나면 다른 공공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 2009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편집국

올해 상반기부터 부동산시장 완화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반향을 불러왔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들쭉날쭉 반복하면서 바닥을 쳤다는 시각과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의 규제완화 약효가 떨어지면서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반기엔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 세금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 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올해 7월 말부터 다자녀 세대 주거안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세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세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량의 3%만 특별공급분량으로 배정하던 것을 공공주택의 경우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분량을 추가로 5% 배정했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3%에서 10%로 공급량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서 확정된 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 원칙을 명확화하고, 주택공사 등이 전매제한중인 주택을 우선매입하여 처분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매각한다. 또한 사업주체에 대한 예비입주자 현황에 대해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의무를 완화한다.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혜택이 확대된다. 이로써 그동안 연 4.5%의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연 2%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됐다. 특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시행일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 1%로 인하된 혜택을 받는다. 또 대출기간도 최장 6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분양보증 사고(부도 등) 사업장 인수자금 지원

올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 부도확산에 따른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위해 부도 등에 의해 매각되는 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까지 국민주택규모 지원이 확대된다. 대상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 보증한 사업장으로서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대한주택보증에서 공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사업장이다. 기존 민영분양주택건설자금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였으나, 이를 85㎡이하로 확대했다. 기금지원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당 5,500만원, 85㎡이하 7,500만원이다. 앞으로 기금지원 시 심사평점 등 심사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주택건설업체 부도확산에 따른 사업장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 외 지역 개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 추진

올해 7월 1일부터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사업 및 물류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국가 50%, 지자체에 50%가 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올해 6월 27일부터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가 간소화 됐다. 그동안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했을 때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주택 거래신고 포함)'를 별도로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같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 택지 전매제한 완화

올 하반기부터 택지를 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어 최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도 더해져 부실가능성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 건설사의 상당수도 최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제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부동산 투기방지, 택지구조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했고, 공공주택용지를 최초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공공 민간 공동사업 관련 규제 완화

민간이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통보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수용 가능한 사업에 대해 보다 신속한 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민간이 주공·토공 등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수용여부 검토에 60일이 걸려 시의 적절한 사업추진이 곤란했었다. 한편 종전에는 매도거부, 알박기 등으로 민간주택건설이 곤란할 경우 민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 택지개발업무 지방 이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택지개발업무가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20만㎡ 미만) 및 실시계획승인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 위임되어 있었으나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에 한계를 드러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국가정책사업 330만㎡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한, 택지개발사업자 지정권한,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권한, 선수금 수령승인 및 토지상환, 채권 발행권한 등을 갖게 된다.

##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제 실시

오는 9월부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입주자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제' 분양방식이 실시된다.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청약-입주자 선정(이하 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 예약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전 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남산 미사, 고양 원흥)의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했다.

##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

총량 150만호	
<b>지역별</b>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
<b>유형별</b>	분양주택 70만호 공공주택 80만호 임대주택 60만호
<b>공급대상 20만호</b>	* 10년간 임대를 보장한 청약전세 10만호 * 20년 장기전세(도입예정) 청약전세 50만호
<b>국민주택 40만호</b>	* 소규모 택지 4천 가호(14만 가호) 60~70% * 임대주택 10만호 * 저가주택을 4천 가호 30%

※ 자료 : 국토해양부



## 고유가 시대, '유(油)테크'로 절약하자

편집국

고유가 시대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 7월 배럴당 15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올 2월에 30달러 선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6월 다시 70달러를 돌파했다. 넉 달 만에 유가가 2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지난 2~3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던 휘발유값이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 유류비 사용 증가로 인한 자가 운전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생활의 지혜를 모아 '유(油)테크'를 통해 한푼이라도 절약해 보자.



### 기름은 언제 넣는 게 좋을까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기름을 넣어야 하는 시기다. 휘발유값이 오를 때는 주유소가 가격이 변동되기 전에 넣어두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대략적인 기름값 등락 시기를 알 수 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추세에 있을 때는 매주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값도 오르기 때문에 먼저 기름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반면 유가와 환율이 하락세에 있으면 최대한 늦게 기름을 구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국제유가가 국내 휘발유값에 적용되는 시점은 대략 2~4주 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당시의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 기름값의 흐름은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정보제공 사

이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싼 주유소를 찾아보는 것도 전략이다.

대표적인 주유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는 오픈넷([www.opinet.co.kr](http://www.opinet.co.kr))과 오일 프라이스 워치([www.oilpricewatch.com](http://www.oilpricewatch.com)) 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름 값이 싼 곳을 지역별, 동별 주유소로 상세히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셀프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면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유할 수 있다.

### 주유할인카드 활용하기

주유할인카드를 잘 활용하는 것도 돈을 아끼는 전략이다. SK에너지는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과 제휴해 최고 8%의 할인을 해주고 있고, GS칼텍스는 국내 10여개 카드사 및 금융기관과 제휴해 60개 이상의 주유 할인 및 적립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에스오일은 은행, 카드사와 제휴해 리터당 최대 80원을 할인해 주거나 100원을 적립해 준다. 현대오일뱅크도 알뜰 주유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의 '제로팡팡카드' 등 리터당 100원을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주유할인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면 식당, 음식점, 극장, 차량 정비 등 사용가맹점에서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를 만드는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보너스카드의 경우 정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일주일이면 집이나 회사, 사무실 등 주소지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운전 습관을 바꿔라

운전습관을 바꾸면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다. 급출발, 급제동하지 않는 것은 기본. 내리막길을 갈 때에도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20% 가량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트렁크는 최대한 비우는 게 좋다.

골프채 등을 실어 10kg 더 무거운 상태에서 50km를 달리면 80cc의 연료가 더 소비된다. 타이어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연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에어컨은 출발하자 트는 것보다 시동을 걸고 난 후 10분 정도 지나 켜면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 휴가철 안전운행 요령

### ▲ 자동차 정비

가족과 함께 떠나는 휴가철, 자동차는 잘 가고, 잘 서야 한다. 별 탈 없이 휴가철 동안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타이어,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만큼은 정비업체에 들러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나 자동차메이커가 여름 휴가철 동안 실시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해 무조건 견인에 응하는 건 금물. 또 다른 휴가철 바가지의 대상이다. 반드시 보험사 무료견인 서비스를 먼저 요청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인근의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견인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해둔 뒤 견인해야 한다. 또,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 왔다면 자동차 구석 구석을 꼼꼼히 닦아내야 한다. 바닷물이나 바람에 포함된 소금기가 차체와 철제부품을 부식시킬 수 있다.

### ▲ 보험

차량 한 대를 여러 명이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휴가 떠나기 전 보험사에 연락해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보험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휴가가 끝난 뒤 운전자를 제한하는 쪽으로 보험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해주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낫다. 보험료는 2만원 안팎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여행보험은 교통

사고는 물론 등반 및 조난 사고, 소지품 분실 및 도난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4일간 여행을 떠날 때 내야 하는 보험료는 1인당 3000원(최고 보상한도 1억원) 정도에 불과해 큰 부담도 주지 않는다.

### ▲ 안전운전

신발이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 슬리퍼나 샌들을 착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슬리퍼나 샌들은 페달을 밟을 때 미끄러져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이힐도 운전에는 독이다. 드라이버 슈즈나 평소 신었던 신발 중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운전용으로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안전에 좋다. 차도 열 받으면 폭발한다. 폭염에 방치된 차 실내는 80도까지 상승한다. 차내에 비치된 1회용 라이터가 폭발해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다. 트렁크에 서너 개씩 실려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도 트렁크 짐에 상당부가 눌러 가스가 새어나오기도 한다. 주차는 되도록 그늘진 곳에 하고, 차 안에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건은 치워두는 게 좋다. 또 휴대폰과 DMB도 운전을 방해한다.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다. 또 여행지 검색을 위해 주행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 대한민국 보건복지의 큰 장을 열다

###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관님이다. KBS기자 출신이었던 필자는 특히 보건복지에 관심이 큰 탓에 비교적 차 전 장관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었지만, 보다 가까이 하게 된 계기는 차 전 장관님이 필자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경리더십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신 후였다.

차 전 장관님은 주로 정계나 의약계에서 복지부장관이 배출되는 관례를 깨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첫 복지부장관이 되신 분이며, 복지부 공무원 출신의 첫 장관으로 유명하신 분이였다. 차 전 장관님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과 정착,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통합, 의약분업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대한민국 보건복지사의 큰 장을 여신 분이였다. 특히, 건강보험통합과정에서는 서슬퍼런 전투환 정권하에서 통합을 주장했다는 죄로 슬한 고문도 받고, 공무원 퇴출이라는 극약처단까지 받으신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는 이 코너를 통해 평소 개인적으로 존경해 온 분을 추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분은 지난 7월 6일 세계 66개국 72개 노인관련학회와 회원 200여만명으로 구성된 세계 노년학, 노인의학회 회장으로 피선된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 뭐래도 차홍봉 회장님일 것이다. 한국노년학회장, 한국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장,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장 등 그 분이 가지고 계신 직함만이 아니다.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고령사회가 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인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실천을 선도하고, 직접체험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노인 복지의 미래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고향인 경북 의성군이 고령친화 모델사업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수립과 주민화합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열정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혀를 내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마도 이런 심정은 비단 필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복지계 전체가 그랬던 바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분은 늘 진솔한 웃음을 머금고 타인을 배려하는 덕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해주면서 건강한 노년, 활동적 노년, 생산적 노년, 성공적 노년, 통합적 노년의 실현을 위해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를 설립했다. 또한 전 세계의 수장이면서 2013년 제20차 서울세계노년학, 노인의학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다. 대화성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여러 대학과 학술단체 강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차홍봉 회장님의 건강을 빌어마지 않는다.

대경리더십아카데미  
김월화 원장



▶대경리더십아카데미 김월화 원장

고객감동의 가치추구,  
에코가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 자산관리컨설팅

▶부동산, 주식, 금융, M&A 투자컨설팅

### 학술연구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경영평가

### 교육컨설팅

▶리더십, 역량개발, 기타 교육컨설팅

### 리서치

▶여론조사, 시장조사, 만족도 조사




그린화워  
지구의  
미래  
울진

Green Earth  
Land of Life

Organic  
FOOD EXPO  
ULJIN KOREA 2009

2009.7.24 - 8.16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주)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 www.ohfa.or.kr | 054-781-2005

주최 | 경상북도 울진군 장소 | 울진왕피천엑스포공원 주관 | (재)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상북도,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산림청녹색사업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농협중앙회, 한국아시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LG전자 등

※ 본 포스터는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저작권이 있습니다.